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-

2023. 1. 26.



법무부

순서

2022년 법무정책 추진성과

□ 추진성과	1
--------------	---

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

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	4
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·이민 정책	7
③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	9
④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	11
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	13

추진성과

□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제 마련

○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

- ▲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,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('22. 10.)
- ▲ 반의사불벌죄 폐지,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,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「스토킹처벌법」,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마련('22. 10.)

○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

- ▲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(14세 ⇨ 13세) ▲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병과 ▲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제도 도입 ▲ 외출 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('22. 10.)

□ 부패·경제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시스템 복원

○ 금융·증권, 국가재정, 공정거래 등 중요 경제범죄 엄단

- ▲ 금융·증권범죄 합수단('22. 5.), 국가재정범죄 합수단('22. 9.) 출범을 통한 관련범죄 적극 수사 ▲ 공정거래법위반 사범 엄정 대응

※ '22. 5.~12. 자본시장 교란 사범 267명 기소(36명 구속), 공정거래법위반 사범 168명 기소(3명 구속), '22. 9.~'23. 1. 국가재정범죄 사범 36명 인지(5명 구속)

○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

- ▲ 마약 제조·유통 등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('22. 9.) ▲ 보이스 피싱범죄 합수단 출범('22. 7.) 및 집중 단속(전년 대비 피해 30% 감소)
- ▲ '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' 참여('22. 8.) ▲ 전세사기 철저 수사('22. 7.)

구분	수 사 성 과
마약(검찰)	'22. 5.~12. 549명 입건(142명 구속) / '22. 5.~11. 마약류 188.8kg 압수
보이스피싱(합수단)	'22. 7.~12. 111명 입건, 국내 총책·조직폭력배 등 24명 구속
불법사금융(검·경)	'22. 9.~12. 283명 기소(18명 구속) / 검찰 직접수사 62명(검찰 인지 17명)
전세사기(검·경)	'22. 7.~12. 145명 기소(46명 구속)

○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

- ▲ 「수사개시규정」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·경제범죄 범위 명확화('22. 9.) ▲ 검찰 수사의 효율성·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 폐지('22. 6.) 및 검찰청 직제를 정비하여 '형사末부만 수사 허용', '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' 제도 등 폐지('22. 7.)

□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

○ 교정시설 인권보호 철저

- ▲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*
▲ 급식비,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

* ① 원주교도소 신축부지 착공('22. 6.), ② 여주교도소 등 7개 기관 증·개축('22. 12.),
③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등 관련 업무협약 체결('22. 8.)

○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

- ▲ 창살 제거 등 인권친화적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('22. 4.)
▲ 보호장비 종류, 사용요건 명확화 등 「외국인보호규칙」 개정('22. 12.) ▲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('22. 8.)

□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법무행정

○ 오래도록 고통 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

-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▲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('22. 11. 故 장준하 유족 사건, '22. 12. 화성연쇄살인 사건, '22. 10. 낙동강변 살인 사건) ▲ 인혁당 사건 관련 '지연이자 면제' 화해권고 수용('22. 8.) ▲ 제주 4·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확대('22. 8.)

○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시

- ▲ '만 나이' 통일('22. 12.),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('22. 11.) 등 「민법」 정비 ▲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 철저 대응을 통한 국익보호* ▲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철저('22. 6.)

* 론스타 사건 관련, 청구금액 대비 95.4% 승소('22. 8.) 및 판정문 정정신청('22. 10.)

○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

- ▲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('22. 9.) ▲ 첨단분야 인턴 비자('22. 8.),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('22. 10.) 신설 ▲ '과학·기술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' 시범실시 및 이공계 특성화 기관 핫라인 구축('22. 12.)

2023년 핵심 추진과제

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

□ 고위험 성범죄자(Sexual Predator)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

○ 한국형 ‘제시카법’ 도입 추진

-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▲ 학교,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) 등으로부터 500미터* 이내 거주제한 ▲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▲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신설('23. 상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)

*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제한거리를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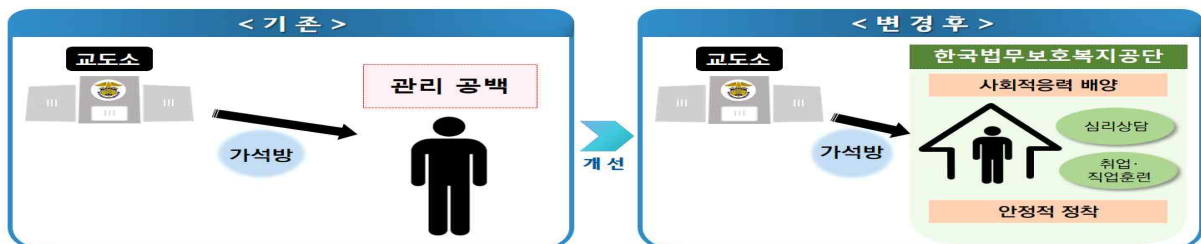
○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

- ▲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*('23. 중 국회 통과) ▲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('22. 11. 입법예고) ▲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**('23. 상) ▲ ‘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’ 시범실시('23. 하)

*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(320개 병상 규모) 신축 예정('23. 10.)

** 재범 방지 및 신속 검거를 위해 혐의사실 개요, 피부착자의 얼굴 및 신체의 특징, 성별, 연령, 인상착의, 은신 예상지역 등 공개

【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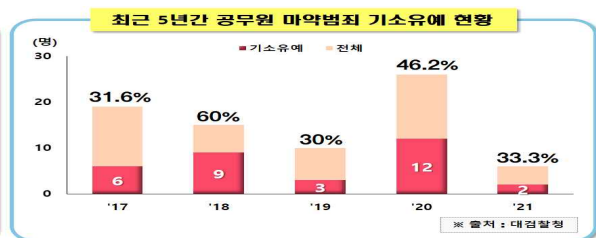
※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주거지 등에서 사회적응력 배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실시

□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

○ 부처·기관간 협력강화를 통해 마약범죄 집중 단속

- ▲ 4대 권역 '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' 출범('23.1분기)
- ▲ '마약수사 실무협의체(검·경·세관)'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('23. 상)
- ▲ 자동검색 프로그램(e로봇)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('23. 상)
- ▲ 공무원,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 엄정처벌*('23. 상)

*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, 향후 초범이라도 구공판 적극 검토하고, 유관부처와 함께 징계강화 방안도 논의



○ 마약중독자 치료·재활 활성화

- ▲ 검찰 단계별 치료·재활 기회 제공*('23. 상) ▲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자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('23. 상) ▲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병원 연계 등 치료 강화 ▲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마약중독자 통합정보 관리, 전문강사풀 구성 등 협력 강화('23. 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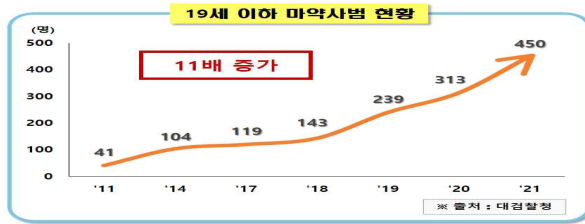
* **구속 기소** 치료감호 병행 **불구속 기소**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 받는 경우 양형에 반영 **조건부 기소유예** 교육조건부(마약퇴치운동본부, 4일) ⇨ 선도조건부(보호관찰소, 6개월) ⇨ 치료조건부(전문병원, 기본 2개월 입원 등)

○ 마약 예방교육 강화

- ▲ 학생·청소년 대상 법교육에 '마약예방' 추가('23. 4.) ▲ 유튜브를 활용한 마약예방 콘텐츠 제작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활성화('23. 6.)
- ▲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 마련*('23. 6.) ▲ 마약 예방교육 확대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**('23. 4.)

* (초기) 예방교육 및 상담 ⇨ (보호관찰 대상자) 지도감독 강화, 특별준수사항 부과
⇨ (시설수용자) 약물중독예방 교육 및 대전소년원 등 치료·재활 전담기관 연계

** 마약 예방교육 대상을 중고생(교육부), 학교 밖 청소년(여가부)으로 확대, 식약처·마약퇴치운동본부('21. 4. 업무협약 체결) 등과 협업하여 재범방지 교육·상담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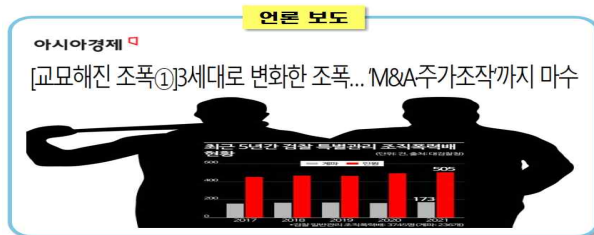


- 10~20대 중심 마약 확산 사례**
- ▶ 고등학생 등 50여 명이 인터넷으로 펜타닐 구입·투약·판매 등으로 검거('21. 5. 대검찰청)
 - ▶ 「좀비처럼 기어 다녀...10~20대 마약 펜타닐 처방 급증한 이유」 처방 받기 쉽고, 가격 저렴, 투약 간편('22. 9. 언론 보도)

□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

○ 사회의 암적 존재인 조직폭력범죄 근절

- ▲ 주가조작, 무자본 M&A,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직폭력배 척결('23. 상) ▲ 전국 18개 지점에 검·경 수사협의체 구축 및 폭력조직 관련 정보·DB 공유('23. 상)



○ 전세사기 엄단 및 피해임차인 법률지원

- ▲ 조직적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집중 단속*('23. 상) ▲ 범정부 '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**'를 통해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('23. 상) ▲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, 임차권 등기 간이화를 위한 「임대차보호법」 개정('22. 11. 및 '23. 1. 입법예고)

* '검·경·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' 개최, '7대 권역 검·경 지역 핫라인' 구축, 범정부 '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' 지속 시행

** 법무부(법률구조공단, 법률홍닥터, 마을변호사), 국토부, 경찰청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및 민간전문가 등 참여('22. 12. 출범)

○ 보이스피싱·스토킹·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

- ▲ 국제형사공조*를 통해 국외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주범 적극 송환('23. 상) ▲ 스톱킹범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('23. 상), 사건처리기준 강화, 스톱킹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엄단('23. 하) ▲ '제2 n번방' 등 디지털성범죄 적극 대처('23. 상)

* 태국 등 아세안 지역 신생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인 「SEAJust」 가입 예정('23. 상)

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·이민정책

□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·이민정책 추진

○ 출입국·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

-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 정책으로 인한 중복·비효율 및 예산 낭비 방지,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·이민정책 결정 등을 위하여 '출입국·이민관리청(가칭)' 신설('23. 상)

※ '출입국·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('22. 11.)'을 설치하여 국민들 의견 수렴 중

○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

- ▲ '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'를 도입하여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 제고('23. 하) ▲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* 추진('23. 상)

* ① 음식업, 숙박업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, ② 학력·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각각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'청년동포 비자 트랙', '동포 간병인력 비자 트랙' 신설

□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·국적 정책

○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

- ▲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(고용허가제) 보완*
▲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·국내유학·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('23. 상) ▲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'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' 도입('23. 하)

* '23년 신규 11만명 도입, 10년 연속 취업에 따른 체류관리·사회통합 정책 병행

○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

- ▲ 반도체,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 활성화
▲ '과학·기술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' 전면 시행 ▲ 창업 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(OASIS)* 활성화로 기술창업 인재유치('23. 상)

* 법무부·중기부가 공동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창업교육과정

○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

- ▲ 조선업 비자 심사지원인력 증원(20명) ▲ 조선 분야 유학생 실무 능력검증 면제 ▲ 숙련기능 쿼터 확대(2,000명 ⇨ 5,000명) 및 조선 분야 별도 쿼터 신설(400명)

○ 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

- ▲ 발급수수료 인하(1만원 ⇨ 5천원) ▲ 유효기간 연장(2년 ⇨ 3년) ▲ 지원 언어 확대(2개 ⇨ 7개) ▲ 단체신청 가능인원 증원(30명 ⇨ 50명) 등 사용자 편의 제고('23. 상) ▲ 입력항목 간소화

※ 관광 활성화를 위한 'K-컬처 비자', '디지털 노마드 비자(일과 관광 병행)' 신설('23. 하)

□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

○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

- ▲ '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('23.~'27.)'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('23. 41만명 ⇨ '27. 20만명대)으로 감축 ▲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▲ 실태조사,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('23. 상)

○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영주제도 전면 재검토

- ▲ 영주제도 및 연계된 외국인 투표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('23.) ▲ 세금 납부,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 실질적 심사 제도 도입*('23. 하)

* 외국인 영주권자는 강제추방이 제한되고,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영주자격 취득 이후의 관리 절차는 부재

○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시행

- ▲ 국제기준에 맞게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('23. 12.) ▲ '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*' 마련('23. 8.) ▲ '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' 구축 등 관광·소비 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('23. 12.) ▲ 빅데이터 (관광객, 유학생, 계절근로자 등) 활용하여 타부처·민간 정책지원('23. 하)

* 외국인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으로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

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

□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

○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

- ▲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불모로 한 불법집단행동은 ‘불법과 비타협’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* ▲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(‘23. 상) ▲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·금품 갈취·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 근절

* 고용부·행안부·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제도개선 병행



○ 법집행 방해 및 회피 사범 엄단

- ▲ 불법적 수단의 법집행 방해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 ▲ 서울중앙 등 7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(‘23. 하) ▲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및 재판시효 정지 제도 도입(‘23. 상 「형소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) ▲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신설(‘23. 중 국회 통과)

○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·모욕범죄 대응 강화

- ▲ 정치적 선동,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·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벌 ▲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한 게시물 삭제요청 절차,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적극 홍보 및 지원(‘23. 하)

○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신종 온라인 협박범죄 적극 대처

- ▲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, ‘좌표찍기’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의 협박범죄 강력 대응 ▲ 신변보호·접근 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적극 검토(‘23. 하)

□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

○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

- ▲ 수사지연,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('23. 상) ▲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('23. 하 「형소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)

○ 부패·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

- ▲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('23. 상) ▲ 공정거래,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 추진('23. 하) ▲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정례화 등 공정위와 협력 강화('23. 상)

○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인프라 정비

- ▲ '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*' 운영('23. 상) ▲ 음성인식조서, 원격화상조사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('23.~'24.) ▲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'가상화폐 추적시스템**' 도입('23. 상) 및 독자적 추적·분석 시스템 개발('23. 하)

* 검찰의 과학수사·포렌식 노하우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(D-Net)을 모델로 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고, 고용부, 식약처, 금감원 등 특사경 및 해경, 군검찰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

** 거래내역 모니터링,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, 송금 전후 자금 출처 확인 가능



○ 사이버범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▲ 데이터 보존명령 등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회원국들간 신속·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는 「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」 가입 추진('23. 하) ▲ 「UN 사이버범죄 협약」 성안 적극 참여('23. 하)

4 미래변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

□ 국가 기본법인 「민법」, 「상법」 개정

○ 65년만의 「민법」 전면 개정

- ▲ 제정 이후 약 65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·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「민법」을 국격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(‘23. 하) ▲ 제3차 ‘민법 개정위원회’ 출범하여 개정필요 분야 발굴 및 집중 연구·검토(‘23. 상)

구분	개정필요 분야
일본식 표기, 한자, 오타자	▶ 一町步(\$1008의3), 蒙利者(\$233), 溝渠(\$229①), 承役地(\$293②) ▶ 임의후견임감독인(\$959의15④) ⇨ 임의후견감독인
60년 전 법제 유지	▶ 현대사회의 빠른 거래주기를 고려한 채권 소멸시효 합리적 조정(10년 ⇨ 5년 이하) ▶ 물권임에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분쟁을 야기하는 부동산 유치권 폐지
시대변화 미반영	▶ I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관계를 민법에서 규율(디지털콘텐츠, AI 등) ▶ 초상·성명 등 인격적 가치 보호를 위한 인격권, 퍼블리시티권 명문화

※ 제1차(‘99.~’03.), 제2차(‘09.~’13.)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‘04년(근저당, 보증 등) 및 ‘14년(인격권, 소멸시효 등) 2차례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, 회기 종료로 폐기

○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「상법」 개정

- ▲ ‘전자 주주총회 제도(통지, 투표, 회의 전반 전자화)’ 도입(‘23. 상)
- ▲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(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, ‘23. 상)
- ▲ 스타트업 창업·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*(‘23. 하)
- ▲ 현물·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 및 방식 정비**(‘23. 하)

* 현재 가장 3년인 이사 임기제한 완화,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경미한 등기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 등 소규모회사 운영의 탄력성·유연성 제고

** ‘선 배당결의 / 후 배당기준일’ 방식도 허용(‘22. 11. 유권해석)하여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 결정 가능

※ ‘22. 12. 교수, 판사,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‘상법특별위원회’ 출범

□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

○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 통합·확대

- 미국,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기조에 발맞춰
① 국제규범 성안·도입, ② 해외진출 기업 지원, ③ 국제분쟁 대응, ④ 국제중재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‘국제법무국(가칭)’ 신설(‘23. 상)

○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 선도

- ▲ 핵에너지·항공·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*의 성안과 도입 선도('23. 상) ▲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강화(해외법제 검토, 기업 디렉토리 구축, 계약서 작성 등, '23. 상)

* AI 이용 계약, 데이터거래 규범(UNCITRAL), 블록체인, 우주항공자산 관련 금융 지침(UNIDROIT),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규칙(HCCH)

○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

- ▲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역량 강화*('23. 상)
▲ 국가간 공법분쟁(영토, 환경 등)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('23. 상)
▲ '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(ICC Congress), 상설중재재판소(PCA) 지역사무소 유치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 허브로 조성('23. 상)

*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7건의 ISDS 진행 중(청구금액 총 7조 4,973억원)

□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

○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이화(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)

- ▲ 국민이 행정·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「민소전자문서법」 개정('23. 상) ▲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('23. 하)



○ 국민편의를 위한 법무서비스 혁신

- ▲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'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' 구축('23. 8. 3단계 사업 추진) ▲ CBT 변호사시험 프로그램 개발('23. 8.) 및 첫 시행('24. 1.) ▲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추진('23. 상)

※ 종이 없는 형사재판을 위한 「형사절차전자문서법」 '24. 10. 시행 예정

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

□ 사회적약자 보호·지원 강화

○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시스템 개선

- ▲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('23. 6.) ▲ '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' 개발('23. 하) ▲ 국선전담변호사가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도록 예산 확보·증원 등 제도 강화('23. 하) ▲ 피해자가 인적 사항 노출 없이 공탁금 수령 가능한 '형사공탁 특례' 철저 시행('23. 상)

○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

- ▲ 친권상실, 성년후견, 유령법인해산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'공익대표전담팀(서울남부·대구·부산지검 설치·운영 중)' 확대('23. 하)
▲ 여성·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 추진('23. 하)
▲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('23. 상)



□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

○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난민정책

- ▲ 난민위원회 심의위원 증원(15명 ⇨ 50명) ▲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(160명 ⇨ 308명, 34개 언어) ▲ 국가정황정보 수집·분석팀 신설 등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('23. 하)

○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

- ▲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'공항 밖 출국대기소' 신설 추진('23. 하) ▲ 생활 공간 확충, 운동장 상시개방 등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('23. 9.)

※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으로 전환 추진

□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

○ 수용시설 과밀화·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

- ▲ 교도소, 구치소 등 교정 현장의 인권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·이전,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·개축 등 추진* ▲ 소년분류심사원 명칭 변경(소년보호심사원) 및 시설 확충(1개 ⇨ 3개)

* ① 거창구치소 신축('23. 1.) ② 신축 대구교도소 보강공사 완료('23. 9.) 후 이전 예정 ③ 천안 등 7개 교도소 및 서울 등 2개 구치소 수용동 증축

※ 53개 교정기관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27개(51%)

○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

- ▲ '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' 운영('23. 상) ▲ ① 정신질환·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, ②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, ③ 적절한 치료감호 제도 운영, ④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논의('23. 하)

※ 법무부 내 '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' 신설('22. 12.)

○ 소년수용자 처우개선 및 학과교육 강화

- ▲ 구치소 내 성인범·소년범 철저 분리('23. 1.) ▲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(1일 6,554원 ⇨ 8,139원, '23. 1. 필요예산 6억 5,700만원 확보) ▲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'소년 전담 교정시설' 운영('23. 상) ▲ 소년교도소 교정·교육 강화*('23. 상)

* 검정고시 과정 필수화, 대학진학 준비·방송통신대학 과정 신설 등

□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

○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'23.~'27.) 수립

- 국제사회의 권고, 국정과제, 새로운 인권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

○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

- ▲ 국가별 정례인권검토(UPR, '23. 1.) ▲ 자유권규약 심의('23. 10.~11.) ▲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('23. 10.~11.) 적극 대응